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 뽑혔다는 뉴스를 들었다.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 범죄, 교육, 의료서비스, 문화환경, 인프라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세계 140개 도시의 주거환경을 평가한 결과라고 한다. 이중 빈은 대중교통의 편의와 알프스에서 제공되는 신선한 수돗물, 다양한 문화생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뒤를 이어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 오사카, 켈거리, 밴쿠버 등의 순으로 뽑혔다. 안타깝게도 필자가 본 순위에는 서울과 부산이 있을 뿐 광주는 순위에 없었다. 광주다움을 선언하고 도시의 모든 부분에서 정의롭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어 최근에 낮아지는 범죄율, 안전하고 깨끗한 인프라, 지하철2호선 착공으로 편리해질 대중교통, 풍부한 먹을거리 등과 같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매력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려면

적인 장점을 널리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도시의 '살의 질'을 놓고 벌이는 순위 경쟁이란 것이 마치 미인 선발대회 같아서 평가하는 사람의 시각과 취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한 해에만 1000만 명이상이 해외여행을 하는 마당에 도시의 좋은 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지 분별할 정도의 눈을 우리도 이제는 갖게 되었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시대를 맞아 광주는 관광객이든 투자자든 외국인들을 확실히 끌어당길 만한 매력적인 도시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데가 많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들은 다양한 분야의 노력으로 점차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도시의 경쟁력을 모두 갖춘다 해서 광주가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일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 잠깐 이슈로 떠올랐던 주거복지도 좋은 도시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추세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와 이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

예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무연사회'의 공포와 고독사의 만연 가능성은 더 이상 우려 수준이 아니다. 또 하나를 꼽자면 노인의 반대편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청년 주거 문제가 가법적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은 몇 년 전부터 세대 간 주거 공유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세대 융합형 룸셰어링(room-sharing) 또는 한 지붕 세대 공감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안은 자산 공유, 세대 연대, 주거 대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매력적인 모델로 느껴질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처럼 혁신적이고 매우 훌륭한 제도임에도 기대만큼 참여자들이 빠르게 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술적인 시행착오뿐 아니라 낯선 사람과의 주거 공유에 대한 거부감과 이를 상쇄할 인센티브 부족, 저렴한 임대료엔 만족하지만 같이 사는 어르신과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반감과 행정적 불편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부터 광주도시공사에서 노후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공공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한다고 공고하였다. 우선 매입 대상지로 공-폐가 등으로 인해 범죄 및 재난 등

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노후 주택으로 인해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약 30㎡규모의 주택을 청년 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해 필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저출산 등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소외받고 있는 지역민 특히 고령자의 재정착을 유도하거나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광주만의 광주형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공동 주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 각자의 삶을 살면서 공간의 공유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한다. 광주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주거복지 측면에서 지역민의 재정착을 돕고 청년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거 복지를 통해 좋은 도시 광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꿈꾸는 2040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임한필 위민연구원 이사-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해야 한다. 소위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지역 공동체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단체가 많이 필요한 것이다. 광주에는 5·18, 6월 항쟁, 정치, 여성, 청년, 장애인, 노인, 일자리 등 여러 아젠다를 다루는 시민단체가 많다. 하나 가장 기초적인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5개 구 지역의 개별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시민단체는 그리 많지가 않다. 올해로 창립된 지 21년이 되어가며 광산구를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광산시민연대가 25명으로 구성된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단을 최근 발족해서 구정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18일에 시민모니터링단 출범식을 갖는 등 활동을 공식화하고 지난달 23일 임시 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기초의원들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민모니터링단 또한 교육하고 훈련되어야 한다. 광산시민연대 구정지기반단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내도록 매주 모여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있다. 또한 구의회 의장과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적극적인 소통도 진행

하고 있다. 자칫 시민과 구민을 대신해서 의회를 모니터링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활동이 특정 세력의 개입을 통한 압력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단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다양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출발은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울 때 의연하게 나섰던 호남 의병의 정신인 '의(義)를 지켜나가는 수많은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 있는 시민'이 광주에는 있었다. 이러한 정신과 실천의 문화가 1980년 5월을 만들어내고 1987년 6월을 만들어냈다. 한국 정치의 위기를 논하는데 앞서서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가 '위임받은 권력'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 지역의 정치는 우리가 바꾼다"는 뚜렷한 목표가 필요하다. 각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단체가 의회 모니터링단이나 구정지기반 등을 조직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신이 뽑은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공명정대하게 감시하고 평가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음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촛불을 통해서 탄

핵한 박근혜 대통령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은 대표자였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인 '민주적 통제'가 '위임받은 권력'에게는 항상 필요함을 기억하자.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해나갈 때는 스스로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의회 감시 및 평가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질 향상과 윤리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마을 공동체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공존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화에 힘써야 한다. 셋째,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도록 정기적인 연수 교육 및 실천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시·대적 소명에 함께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광산구에서 시작된 기초의회 모니터링 활동이 향후 광주 5개 구의 시민단체와 연대해 구의회를 감시하고, 광주시의회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 시정, 시의회, 구청, 구의회로부터 독립적인 시민모니터링단을 시민단체에서 연대해 운영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보고서 만들어 시민과 언론에 공개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WTO 개도국 지위 유지로 농민 피해 없도록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 결정 시한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도(農道)인 전남 지자체와 농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흑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 있다고 WTO가 이 문제를 손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 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의 네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나라여서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개도국 지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엇그제 영세한 농업 구조

와 낙후된 농촌 여건을 감안할 때 개도국 지위는 우리 농업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를 유지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건의에서 그동안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 당해 왔음을 지적했다. 시장 개방과 농산물 수출 불만으로 농가 소득은 정체되고,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 인구 유출로 농촌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보호하는 대신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마늘, 고추 등의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고 보조금도 줄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 생존권은 물론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개도국 지위는 꼭 지켜 내야 할 것이다.

계엄군 '전사자' 표기 문제 당장 바로잡아야

5·18 당시 사망한 경찰은 '순직'으로 처리된 반면 계엄군 사망자는 '전사자'로 등록돼 있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가보훈처는 국방부에 검토 의견만 요청했을 뿐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순직자와 전사자는 그 의미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천양지차 있다.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인 데 비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이다. 결국 5·18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자로 표기했다는 것은 당시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28묘역 등에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계엄군 23명이 안장돼 있다. 이 중 오발사사고로 사망한 A일병을 제외한 22명의 비석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새겨져 있다. 이들은 서울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의원들은 국방차관과 보훈처장 등에게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사안을 검토해 '전공심사 재심 요구'를 주문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훈처는 국방부에 검토 의견만 요청하고 후속 조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권익위나 인권위 등도 사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엇그제 열린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장병만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국가보훈처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광주항쟁 참여자를 적으로 간주하며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왜곡한 사실이 지금까지도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보훈처는 국방·권익위·인권위 등과 협조해 지금이라도 당장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15년 5월,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로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였다. 당시 중동을 방문하고 돌아온 감염자로 인해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된 탓이었다. 감염자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전 세계 이목이 우리나라에 쏠린 가운데 38명이 메르스로 사망했다. 한 번 걸리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메르스는 전정 못잡은 공포감을 주었다. 이 같은 충격은 메르스 사태 때뿐 아니라 사스(2003년), 에볼라 바이러스(2014년), 지카 바이러스(2016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신종전염병은 지구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하연에서도 치명적인 '무기'와 다름없다. 이처럼 치명적인 죽음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실체는 무엇일까. 옥스퍼드 사전은 바이러스에 대해 "단백질 외피로 싸인 핵산분자로 구성된 감염성 물질로, 너무 작아서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으며 살아 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라고 기술한다. 또한 바이러스 속주는 모든 생명체,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본다. 최근 연천의 돼지 농장에서 열네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연천 지역 내 사육 돼지 전방을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단위 살처분 결정은 네 번째로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국단의 조치다. 바이러스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과학자들은 160만여 개 바이러스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중에서 1% 정도만 규명됐을 뿐 99%는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자신의 숙주에서 공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는 모든 바이러스가 질병의 원인으로 치부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전염병 전문가인 최장석 수석사는 메릴린 루싱크가 펴낸 '바이러스'(감수의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실체는 무엇일까. 옥스퍼드 사전은 바이러스에 대해 "단백질 외피로 싸인 핵산분자로 구성된 감염성 물질로, 너무 작아서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없으며 살아 있는 숙주 세포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라고 기술한다. 또한 바이러스 속주는 모든 생명체,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본다. 최근 연천의 돼지 농장에서 열네 번째

바이러스

기 고

돼지가 아프다



최우성 농협 전남본부 축산사업단 차장

일 kg당 6131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ASF 확산 우려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출하 물량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고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지난 7일에는 kg당 3000원 초중반까지 떨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15%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이상한 점은 냉장 삼겹살의 도매 가격은 낮아진데 반해 소매 가격은 kg당 2만 원 선을 웃돌아 1년 전 가격 대비 6% 이상 오르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한국인이 선호하는 삼겹살, 목살 부위만 집중적으로 구매하려는 상인들의 상술도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축산물 취급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돼지 도축 물량은 예년 수준 이상이 될 것이며, 돈육 물량 재고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한돈산업을 지키기 위해 전 국민이 ASF에 대한 위험성을 함께 공유하고 인식해야만 한다. ASF 발생후 여 행사 현저 축산 농가 방문은 삼가고, 귀국 후에도 국내 축산 농가 방문은 피해야 한다.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 등 축

산 가공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한다. 우리 소비자들은 현재의 ASF로 인해 돼지고기를 멀리 하기보다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건강 유지에 중요함을 인식해 소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ASF로 인해 빠져 있는 국내 한돈 농가들을 생각하고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건강까지 챙기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이는 현재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축산업(한돈업)을 살리는 길이며, 농심을 이해하는 하나님 긍정적 소비 정서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새 축산물에 대한 인식의 오해가 안티 축산을 만들어 내는 등 부정적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잘못된 정보에 근거 없는 믿음이 보편적 진실처럼 다가오는 것을 지혜롭게 지양해야만 한다.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농협, 생산자단체, 소비자 등 모두가 나서 선진화 된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   |   |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무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br>편 집 부 220-0649<br>정 치 부 220-0632<br>경 제 부 220-0663<br>사 회 부 220-0652<br>전 남 본 부 220-0642 | (대표 FAX 222-4918)<br>문 화 부 220-0661<br>예 향 부 220-0692<br>사 진 부 220-0694<br>체 육 부 220-0633 | 경 영 지 원 국 220-0515<br>(FAX 222-8005)<br>기 획 관 리 국 227-9600<br>(FAX 222-0195)<br>디 자 인 실 220-0536<br>*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문 화 사업 국 220-0541<br>(FAX 222-0195)<br>무 국 220-0551<br>(FAX 222-0195)<br>세 울 지 사 02-773-9331<br>(FAX 02-773-9335)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